

## [26학년도 6월 평가원 5번]

- 지금처럼 선지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면, 전체 케이스를 모두 적고 시작하는 것이 빠릅니다.
- $t \sim t+3$  시기 중 정부 형태가 두 번 변경되었으므로  $t$  시기의 정부 형태와  $t+3$  시기의 정부 형태는 동일합니다.
- $t, t+1, t+2$ 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고,  $t+3$ 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습니다.  
따라서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가능성 있는 시기는  $t, t+1, t+2$  시기입니다.

### (1) $t$ 시기, $t+3$ 시기의 정부 형태가 전형적인 대통령제인 경우

- 정부 형태가 두 번 변경되었으며 연립 내각은 2회 구성되었으므로  $t+1, t+2$  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입니다.

### (2) $t$ 시기, $t+3$ 시기의 정부 형태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인 경우

- $t$  시기에는 연립 내각이,  $t+3$  시기에는 단독 내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따라서 정부 형태가  $t+1, t+2$  시기 중 한 시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, 다른 시기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입니다.

→ 따라서 모든 케이스를 분류하면 ( $t, t+1, t+2, t+3$ ) 시기의 정부 형태로 가능한 것은

- ① (대, 의, 의, 대) / ② (의, 대, 의, 의) / ③ (의, 의, 대, 의)입니다.

## [선지 분석]

- ㄱ.  $t+3$  시기에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면, 이는 ②, ③ 케이스입니다. 이때  $t$  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이므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.
- ㄴ.  $t+3$ 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B당이면,  $t+3$  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입니다. 이는 ① 케이스입니다.  
이때  $t+1$  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ㄷ.  $t+2$  시기와  $t+3$ 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, 이는 ② 케이스입니다. 이때  $t+1$  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이므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지 않습니다.
- ㄹ.  $t+1$  시기와  $t+2$ 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, 이는 ① 케이스입니다. 이때  $t+3$  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이므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## [26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]

- 이 문제처럼 제시문이 긴 문제는 선지에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지를 우선 거르고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.

이러한 문제에서 시간을 쓰기 위해 다른 문제를 빨리 푸는 것보다는

이러한 문제에서 정답을 좀 더 빠르게 찾고 다른 개념 문제나 선거구 문제를 신중하게 한 번에 풀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.

- 다른 모든 문제를 풀고 와서 시간이 남는 경우 이상한 점이 있는 선지에 대해 제시문을 확인하며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.

-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, 평가원 시험에서 선지의 가정 부분은 장난질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②에서 '을이 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'에서 을은 동물 점유자로 주어지는 경우가 99%입니다.

### [선지 분석] - 우선 선지에서 모순점 찾기

① **공작물의 점유자, 소유자 책임**에 관한 선지입니다.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방화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공작물의 소유자에만 해당합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췌독합니다.

② **동물 점유자 책임**에 관한 선지입니다. 보통 동물 점유자의 책임 문제가 나오면, '동물 소유자'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. '을이 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'에서 을은 동물 점유자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A는 동물 소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, 이때 A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발췌독하지 않습니다.

③ **채무 불이행**에 관한 선지입니다. 보통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나오면, '피용자'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.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의 주체에 관한 선지는 답이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발췌독하지 않습니다.

④ **사용자 책임**에 관한 선지입니다. 보통 사용자 책임이 나오면, 1)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, 2) 피용자의 업무 중의 일인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. 3)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. 병이 정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2)나 3)에 해당한다면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췌독합니다.

⑤ **감독자 책임**에 관한 선지입니다. B가 책임 능력자인 경우 B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발췌독하지 않습니다.

→ ①, ④에 대해서 제시문을 보면서 우선 판단하면 됩니다. 99%는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.

①, ④ 중에 확실한 답 하나가 없다면 그때 가서 다른 선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.

① 제시문을 볼 때, 선지에서 등장한 '방화문'을 찾아가면 됩니다. 임차인(점유자)인 을이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차적 책임을 지는 임대인(소유자)인 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제시문을 볼 때, 선지에서 등장한 '화재'를 찾아가면 됩니다.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텔레비전이 정의 과실이 아닌 자체 결함으로 폭발한 것입니다. 따라서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인 병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→ 여기까지 오면 ④가 답이 될 확률이 99.9% 이상입니다. 불안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고득점을 향한 지름길입니다.

법적 판단에 관한 문제를 낼 때, 출제자는 ① 제시문에서 등장하는 관계 파악을 잘하였는가? ② 선지에서 사용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? 두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. 선지에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지를 우선 거르는 것의 취지는 출제자의 의도 중에서 ②를 먼저 판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. 개념 공부, 기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기출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②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.

[26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]

- 20초 컷 문제입니다. 법적 판단 문제는 정답 선지가 될 가능성이 낮은 선지를 거른 후, 제시문 판단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.

[선지 분석]

- ① 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누군가(피의자, 검사 모두)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.
- ② 기소 이후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관이 아닌 검사에게 있습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.  
또한 해당 선지에서 갑이 피의자,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제시문을 보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.
- ③ **기소 이후 갑(피고인)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** 답은 ③입니다.

→ 여기까지만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나, ④, ⑤ 선지도 봐줍시다.

④ 징역은 교정 시설에 수용해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입니다.

⑤ 유죄 판결 확정 이후 갑은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없습니다.

### [26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]

- 계약에 관한 법적 판단 문제입니다. 불법 행위 및 손해 배상에 관한 법적 판단 문제에 비해서는 선지 자체가 정답이 될 확률이 낮은 경우는 적지만(상대적으로 선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지만), 어느 정도 선지 자체가 정답이 될 확률이 낮은 경우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, 제시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#### [선지 분석]

- ① 갑이 무언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
- ② '철회'가 나오면, 1) 을이 미성년자인지 2) 계약 당시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는지 3) 동의나 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면 됩니다.
- ③ '확답 촉구'가 나오면, 1) 병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인지 2) 동의나 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면 됩니다.
- ④ 계약을 추인하면, 확정적 유효 계약이 되므로 이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
- ⑤ 동의를 얻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

→ ②, ③에 대해서 제시문을 보면서 우선 판단하면 됩니다. 99%는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.

②, ③ 중에 확실한 답 하나가 없다면 그때 가서 다른 선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.

② 갑은 을(17세)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따라서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③ 병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아니므로 확답 촉구권이 없습니다.